

# 신뢰와 협동으로 서울의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박원순(서울특별시 시장)

“두 다리나 두 손처럼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멋진 말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협력하고 연대할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빈부격차와 자원고갈, 대량의 실업문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세계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또 하나의 세상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서울-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입니다. 저는 연대하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미 경제위기, 환경문제, 지역공동체 붕괴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서울시장 기조연설 중>

4

## 1. 시작하며

사회적 경제는 희망과 대안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1997년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자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였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노동부에서도 ‘사회적’이라는 말을 정책 용어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면서였다. 이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 일’로 정의하고,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에 충분히 공급하고, 더

불어 그 사회적 일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만들어 내려는 시도였다. 이후 더욱 속도를 내더니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법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2년 말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2015년 현재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6,500여개, 이 중 서울은 1,7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의 수는 비록 많은 허수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변화와 대안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는 비단 국내의 경우만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해외 사회적 경제의 선진 사례지역들도 모두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발전하였다.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더욱 꽃 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가진 의미와 원리,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리에 대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경제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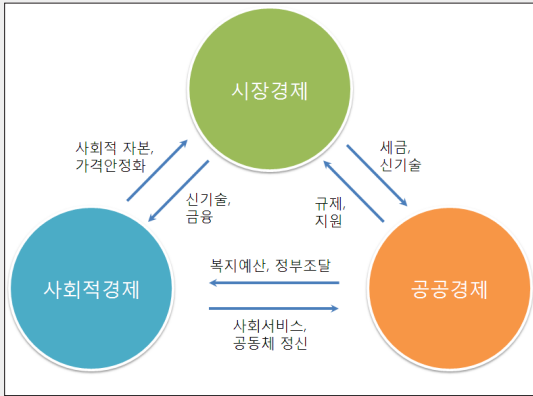
왜 경제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덧붙었을까? 경제가 ‘사회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증가할 때, 구성원 개인의 이익도 증가한다는 사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는 개인과 기업들의 수익추구 활동이며,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이 시장이다. 그래서 흔히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시장경제는 매우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된다. 혼자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옆라인의 누군가와 경쟁하며 달리면 더 빨리 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개인과 기업들의 자유로운 수익추구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문제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편리를 추구하여 일회용품 많이 쓰고, 기업들이 당면한 이익만 추구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인류 전체에게는 해가 된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어긋나는 경우를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데, 개인의 이익추구와 경쟁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시장경제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에는 취약하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신뢰와 협동이다. 모두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협동이다. 협동이 지속가능하려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와 협동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사회적 딜레마에 해당한다. 환경 문제 외에도 저출산, 금융위기, 부동산 투기 등도 그렇다. 저출산의 경우를 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선택일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의 선택들이 모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시장에서의 공급(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여 복지를 늘려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재정 마련과 정확한 수요 파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의 당사자들이 신뢰와 협동으로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가 답이 될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201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그림 1> 사회적 경제·시장경제·공공경제의 관계

조금 더 명확한 정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내린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빌려보자. 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는 회원과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며,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을 하고,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우선하며, 참여의 원칙을 강조하는 조직과 행위를 말한다.” 유럽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우선에 놓는 민주적 가치를 가진 경제의 하나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혁신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들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크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3. 퀘벡과 에밀리아로마냐에서 배우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

사회적 경제의 중요 요소인 신뢰와 협동은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생겨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인센티브보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1995년 당시 퀘벡은 12%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로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시민운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사회적 경제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시민운동, 노동운동, 대학 등 다양한 지역 조직들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인 샹티에(Chantier)를 만들어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업서비스, 기금, 교육과 훈련, 연구라는 4가지 축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주체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들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것들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샹티에라는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주축이 되어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금 마련에서는 특히 노동조합과 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연구는 지역의 대학이 주축이 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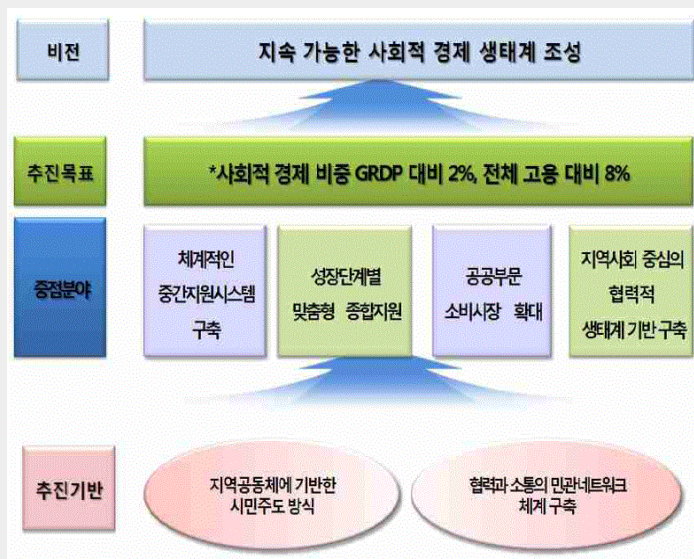
더불어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 지역개발을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의 지역개발이 개발의 원천을 외부에서 찾았다면,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공동체 지역개발은 개발의 원천을 공동체의 내부에서 찾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며, 공동체가 겪고 있는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문제 해결에 사회적 경제 방식과 주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도 협동조합을 필두로 한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곳이다. 이곳의 GDP는 이탈리아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산업 네트워크 덕분이다. 이 지역의 기업 수는 40만여 개인데, 인구수는 약 430만 명이나 하나의 기업 당 직원 수는 약 10명 정도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협동조합도 많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보, 장비, 사람, 주문을 공유한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장조사, 기술훈련, 인력관리, 연구개발과 같은 사업서비스도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용한다. 에밀리아로마냐의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업서비스 지원 중간기관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충분히 보완된다. 덕분에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체계의 도입이 신속히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산업 네트워크 중심이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지역개발이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퀘벡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 4. 서울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정책적 성과

이제 서울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서울시는 2012년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 도시 선언, 공유도시 선언 등을 발표하며 사회적 경제 정책의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374개, 마을



출처 : 서울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 계획 (2012,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그림 2> 서울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 계획 비전과 목표

기업이 125개, 협동조합이 1695개로 총 2,196개에 달했다. 여기에 170여개의 자활기업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2012년 이후 협동조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을 중점분야로 삼아 2012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기반은 지역공동체 기반 시민주도와 민관 거버넌스이다.

사회적 경제가 가진 자율성, 지역성을 살리면서 민간 주체들의 능력을 키우고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잡은 것이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민간주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좋은 판을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의 사회적 경제 지원이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와 같은 직접 지원 중심이었던 탓에 나타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큰 방향 아래 2013년에는 인재육성, 유통시장 다변화, 신규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지원,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 등이 새로운 중점 분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체계 구축 운영, 사회적 경제의 규모화, 우수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추가되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가 이룬 성과를 몇 가지 꼽자면, 우선 활발한 민관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현재 한달에 한 번 ‘사회적 경제 민관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4대 부문(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협의체와 민간 조직, 서울시 산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의 공동 생산과 집행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가끔은 따끔한 비판을 들을 때도 있고,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시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과 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민관협의회를 통해 만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된 도움을 얻고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민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체 사업비 비중 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란 기업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 경영 및 사업서비스, 공간 제공 등의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통한 상시적인 상담과 교육 진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지원, 혁신형 기업이나 우수 사회적 기업 공모 제도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연구와 사업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을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성동구의 경우 성동구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중심으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진행하는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정된 관점이 있는데, 이를 다양화하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해결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래서 보육, 지역재생, 도시농업 등과 같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였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곧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된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실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트리 플레

닛',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제작하고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지를 위한 바느질', 경력단절 여성을 역사체험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 공정여행 업체 '트러블러스맵' 등이 모두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들이다.

네 번째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시장 확대를 들 수 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판로개척인데, 공공부문에서부터 판로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구매 보고회 및 공공구매 실적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광화문 장터, 서울시청 광장 장터 등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개설하여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쇼핑몰 함께누리몰(www.hknuri.co.kr)을 개설하여 판매통로를 확장해가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국제협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을 개최하여, 2013년에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2014년에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홍콩 등 해외 8개 도시와 8개 단체, 2014년에는 해외 18개 도시와 43개 단체가 참가했다. 서울시는 의장국으로서 이들 도시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맺으며 사회적 경제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경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5. 또 하나의 대안 - 공유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유의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

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방, 책 등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네이버 한국경제 경제용어사전)

서울시는 '공유'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유는 자원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여 적은 비용으로 소유하지 않고도 소유한 것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고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결국에는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또 하나의 생활방식이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희 자원을 함께 나눠 자원부족과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환경도 이롭게 하는 사회혁신적인 방안이다. 서울은 유희 생산력과 잠재 소비자가 밀집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환경 등 공유경제가 경제활동으로 뿌리내리기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조례제정('12.12), 민관협력방식의 공유촉진위원회 구성('13.2)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유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중심의 공유경제가 발달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와 달리 서울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만 이용하던 회의실, 강당 등의 공공시설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과 공유하였으며, 서울시가 보유한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누구나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렴

한 가격으로 승용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나눔카(카셰어링), 남는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가끔 사용하는 공구를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구도서관 등을 통해 실제 시민의 삶속에 공유가 생활화되도록 하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생과 빈방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주거를 공유하는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남는 옷과 필요한 옷을 공유하는 ‘아이웃나누기’ 등을 통해 나눔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단체와 기업을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민간부문 공유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50개의 공유단체와 기업을 지정,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더불어 블루오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민박 ‘코자자’, 카페, 회의실 등 비어있는 공간을 빌려 주는 ‘아이들랏’, ‘엔스페이스’, 거주자우선 주차장 등 주차장을 공유하는 ‘모두컴퍼니’,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우주’ 등(공간공유 23개), 서울시 나눔카 브랜드로 카셰어링을 하는 ‘쏘카’, ‘그린카’, 작아진 아이들의 옷을 서로 나누는 ‘키플’, 정장을 공유하는 ‘열린옷장’ 등(물건 공유 12개), 공유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허브」를 운영하는 ‘크레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여행경험을 공유하는 ‘플레이플래닛’, ‘마이리얼트립’,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위즈덤’, 음식을 통해 모임을 만드는 소셜다이닝 기업 ‘집밥’ 등(경험·지식·정보공유 15개)이 있다.

지난해부터 시민 생활 속에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단위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학교 공유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마을 및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28개 공유사업을 발굴·추진

하였고, 학교 내에서 공유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7개 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마포, 서초, 노원, 영등포 등 4개 구를 순회하면서 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공유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가는 공유한 마당’도 운영하는 등 자치구로 공유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유 제도개선 추진단」을 통해 기존 산업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공유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 관광, 세제, 주차장, 보험, 식품업, 건축 등 7가지 영역을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는 각 분야별로 포럼이나 토론회 개최를 통해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정책 추진 3년차로 접어드는 올해에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계가 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유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영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표 1> 대표적인 자치구의 공유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공간공유	하늘나무 사랑방, 동네부엌 밥심 (성동구)	동네부엌을 개방하여 공간공유 커뮤니티, 소셜다이닝 등 삶과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공유 등 추진
	우리동네 공유 공간, 잇슈(금천구)	구 독산1동파출소 자리에 다양한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공유공간 조성·운영
주거공유	주거공유멘티멘토링을 통한 재능 및 기숙사 공유(중랑구)	서울시립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숙박을 제공하고 시립대학생은 고등학생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주차장공유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및 공유기업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방문주차자의 편의를 도모
	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성북구)	임대아파트 주차장의 유휴 주차 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협약을 맺고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는 아파트관리비로 지급
물품공유	삼개나루 좋은이웃, 공유센터(마포구)	재개발대상 건물을 활용하여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하고 공간공유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색다른 쉼터 제공
	장난감 공유, 동동레코텍(강동구)	장난감 공유를 위한 택배서비스 실시, 가정의 유휴장난감 수집을 위한 나눔 장터 등을 운영하여 장난감 공유 활성화 추진
	아이웃 공유(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서초구)	아이웃을 공유기업에 보내고 적립 받은 포인트로 다른 아이웃을 구매
경험공유	이태원에서 즐기는, 세계여행(용산구)	이태원 지역의 도시민박 특화 및 로드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가이드가 되어 관광객에게 골목여행 체험을 안내하는 등 공간·경험공유 프로그램
	문래동 공유 여행(영등포구)	문래예술 창작촌을 중심으로 문래창작촌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문래동 마을예술가와 주민 가이드를 통한 생생한 여행 정보와 경험을 공유

## 6. 2015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사실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해외 사회적 경제 선진지역들이 100여년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점은 사회적 경제가 그들만의 ‘찾잔 속 태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고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외연을 넓혀서 다양한 부문과 만나고, 그것 모두가 합쳐져서 질적인 규모화로 성과를 맺어야 할 것이다. 올해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이런 점에 주목할 계획이다.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주도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계속 추구하되, 아래와 같은 분야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의 사회문제 해결 측면과 지역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업종의 개발 및 집중지원과 사회적 경제 특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략업종의 경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당



면하여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보육, 의료, 주거, 노인 돌봄 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의 경우, 최근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재정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진다고 해도 운영 주체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민간 어린이집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공동육아나 어린이집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경제 특구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화를 조금 더 강조한다. 특정 지역 내 문제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금융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500억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의 기금을 더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준비기였던 만큼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과 사회투자기금의 활용을 긴밀하게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투자기금을 이용하고,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이 결합되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위한 교육이나 사회적 경제에 입문하려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교육은 아직 미미하다. 그래서 올해 초중등용 사회적 경제 교재 개발을 추진 중

이고, 학교 협동조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 7. 마치며

정책이란 것은 마음먹은 대로 결과를 내지 않을 때도 있다. 사회적 경제와 같이 이전의 사고방식과 조금 다르고,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가 없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국내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이제 막 불이 붙은 사회적 경제를 꺼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인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와 협동을 확산해 나가고, 그 길에서 민간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